

열병합발전소 ‘황색 물방울’ 피해 논란

수완지구 주민 “차량·건물 변색에 인체 영향 불안” 잇단 호소

환경분쟁조정위 민원 접수…광산구 “지난해 측정, 이상 없다”

광주 수완지구 주민들이 수완열병합발전소(발전소) 굴뚝에서 발생하는 백연(白煙·수증기가 연기처럼 보이는 현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연돌(굴뚝) 2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으로 인근 주택가에 황색 물방울이 떨어져 차량과 건물이 변색하는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수완열병합발전소에 일정부분이 있는 광주시 등은 굴뚝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며 관리·감독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광산구, 수완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초부터 35가구 100여명이 거주하는 발전소 인근 해솔마을에 황색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수완

에너지(주)에서 운영하는 발전소 연돌(굴뚝) 2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 황색 물방울이 떨어져 차량과 미색(米色) 색상의 주택에 떨어져 주변이 노랗게 변했다”면서 “인체에도 유해한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황색 물방울이 흰색 차량과 미색(米色) 색상의 주택에 떨어져 주변이 노랗게 변했다”면서 “인체에도 유해한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광산구에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4차례나 접수된 상태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6월12일 발전소 굴뚝에서 대기측정을 실시해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17ppm)을

검출했으나 기준치(50ppm) 이하라는 이유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완지구 주민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수완에너지측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성분 분석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수완에너지는 지난달 8일 “백연현상은 겨울철에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물방울로, 발전소의 백연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달 19일 백연현상으로 피해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서를 광주시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일부 주민들은 발전소의 백연현상이 공론화될 경우 집값 폭락 등이 우려돼 피해 사실의 유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만간 현장 방문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분쟁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이끌어내는 게 주임무라는 점에

서, 일부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 피해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씨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 기준치에 미달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차량 색깔도 변하게 하는 오염물질이 인체에 쌓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주민도 있다”고 강조했다.

수완에너지 관계자는 “백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곳은 없었으며, 설치해도 비용 등 효율성이 부족하다”면서 “내부적으로 백연절감을 위해 노력중이며,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백연피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완에너지의 수완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LNG)를 이용하는 발전용량 118MW·91Gcal/h급의 열병합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수완지구 등 총 4만여 가구에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여자친구 감금·폭행

의전원생 제적 정당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이 학교 측 제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폭행 결과가 중하고 의사 지망생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1일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7)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박씨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원고가 피해자와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므로 격리할 필요성도 크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는지도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일반 대학원생이 아니라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 진료를 염두에 둔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사람 생명과 건강 증진 및 보전에 관한 수행 의사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5년 3월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약한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학 측은 판결 이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뺑주기 논란’이 일자 같은해 12월 박씨를 제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학생활 설레는 예비대학생들

11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에서 수시합격자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이 대학생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첫 심리

5·18 단체 등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1권·혼돈의 시대’ 수정본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첫 심리가 열렸다.

11일 광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가 시작됐다. 5월 단체와 전두환 전대통령측 변호사들은 심리에서 양측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2차 법정 다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씩씩곳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5·18재단은 책에서 ‘북한군 투입설’ 등 5월의 진실을 왜곡한 33곳을 추려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해 8월 5·18재단이 승소로 판결해 회고록의 유통 등이 중단됐다. 하지만, 출판사 자작나무측은 재단이 문제 제기한

33곳을 검은색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13일 수정본을 출간했다.

5·18재단은 수정본에서 ‘5·18 희생자 암매장 사실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1980년 5월21일 집단발포 이전 시민군 무장 왜곡’ 등 40군데를 추가 발공해 2차 소송을 냈다.

한편, 5·18단체 등이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지목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오는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지검, 범죄 피해자 돕기 앞장

지역사회와 함께 지원…지난해 2400건 상담·10억 지원

#1. 지난 2014년 일가족 살해사건으로 가족이 모두 숨지고 홀로 남은 B씨는 보복의 두려움으로 구조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이어왔다.

광주지검 피해자 지원실은 지난해 6월 범죄피해자 지원금 미지급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신청기간 만료를 3개월 앞둔 B씨를 찾아내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등 총 2800여만원을 지원했다.

#2.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유사강간을 당한 A(5)양과 A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가정 경제를 책임져온 가정이 구속되면서 주거와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게 됐다.

A양 가족은 중상해 피해 등을 입어야만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 대상도 아니어서 길거리로 내쫓길 처지가 된 것이다.

A양 가족의 막대한 사정을 접한 광주지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후원금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거시설을 비롯한 생활용품,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지역사회 도움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양부남)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 피해자의 재가와 치유를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의 적극적인 후원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자립 등을 돕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모욕 발언

순천대 교수 불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순천대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

11일 광주지검과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은열)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2400여건의 범죄피해자 상담을 진행해 10억 3600여만원을 지원했다. 또 범죄트라우마 치유기관인 광주스마일센터를 통해 총 6116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지원과 사회적 지원, 생활관 입소 등을 제공했다.

광주지검은 범죄피해구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돕고 있으며, 광주스마일센터 및 연계 심리치료기관과 연계해 범죄피해자들이 심리적 아픔을 이겨내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기관·단체·기업들도 범죄 피해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은행과 기아자동차, 광주시의사회, 광주순환주식회사 등이 1억 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경우 중·상해 등 일정 조건이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후원금은 A양 가족의 사려치럼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를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진기 광주지검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아픔의 치유, 일상으로 복귀 및 재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후원이 범죄 피해자들이 재가의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었으니까 따라다니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대학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교수를 파면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폭설에 택시 타고 충남서 광주 온 20대男 “돈 없다”



○…폭설이 쏟아지던 지난 10일 충남에서 목포를 거쳐 광주까지

6시간(320km) 동안 택시를 타고 온 20대 남성이 요금을 내지 않아 경찰서행.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송모(24)씨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충남 당진시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앞에서 이모(57)씨의 택시를 타고 목포를 거쳐 광주시 서구 광천동까지 온 뒤 “돈이 없다”며

택시요금 48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송씨는 가출한 이후 6차례에 걸쳐 택시로 장거리 무임승차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송씨는 아무런 이유와 돈도 없이 택시를 타고 광주로 왔다”면서 “목적지에 도착한 송씨가 탈아나려 하자, 이를 눈치챈 택시기사가 경찰서로 직접 데리고 와 신고했다”고 설명. /김한영기자 young@

최고의 투자가치 / 자신있게 추천 / 사정상 **즉매** 합니다.

-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411-10번지외 10필지 (월정 삼거리 코너, 구 월정초등학교 자리)
- 대지 5843평, 건물 512평
-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 등등
- 현재 관관농원/ 펜션/ 식당/ 캠핑장 운영중
- 2차선 도로접, 삼거리 코너, 계곡등 최고의 위치
- 연수원/ 수련원/ 요양(병)원/ 펜션/ 캠핑장 등등 모든 용도개발 가능
- 시세 30억, 급매 20억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010-3605-5000

